강제징용 할머니·유족 73년만에 한 풀었다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승소…1억2천만원 등 배상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 서둘러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해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김현정 부장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1927년 출생·1944년 사망)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사망한 최 할머니의 유족에게는 상속분에 근거해 325만6684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미쓰비시는 최근 개봉한 영화 '군함도'에 나오는 전범기업으로,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배상을, 최 할머니 유족 이씨는 3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는 1억2000만원의 배상액을, 도난카이 대지진 때 사망한 최 할머니는 1억5000만원을 적용해 상속 지분을 산출했다.

이 배상액은 피해자들의 위자료만 산정한 금액으로,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산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임금 체불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 충분하므로 이 소송에서 일본법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에 협력해 어린 여성들을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급여도 주지 않고 강제 노역하게 했다"며 "원고들은 목숨을 잃거나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군위안부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중학생 연령대였던 1944년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가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노역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가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을 지원했다.

이날 판결은 3차 소송의 1심 결과이며, 1차 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차 소송 당사자인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씨의 1심 판결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미쓰비시 측은 다른 소송 전례에 비춰 이번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의 공동 법률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유사 소송 3건이 4년 동안 계류 중"이라며 "빨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이를 계기로 한일 정부가 해결책 논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일본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과 변호인단 등이 8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 배치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설치

광주를 비롯한 대구·대전·부산 등의 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이 배치돼 수사절차에 대한 이의·진정과 피해자 보호 업무 등을 맡는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광주지검 등 대구·대전·부산 등 8곳에 확대 설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 결과를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

법무부는 주요 사건의 1·2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라도 의무적으로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사건평정위의 심의 결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연장 선상에서 짜맞추기식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 등을 야기하는 강압 수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근무 경력이 전체 경력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도 형사부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사법연수원 30기 이상 검사부터는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 근무 경험이 없으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배치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일께 중 고검 검사(지검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구멍 문제 등 원안위가 시공사에 법적인 조치 나서야"

환경운동연합 손배·고발 촉구

환경운동연합은 8일 영광 한빛원전 4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내부 구멍)과 철판 부식이 발견된 데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공사에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가 부실시공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부실시공으로 원전 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 현대건설에 대해 원안위가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 전문가들은 철판 부식 원인이 콘크리트 문제일 수 있다고 점검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원안위는 지난해 한빛 2호기에서 철판 부식이 발견됐을 때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최상단에서 두께 기준 미달 부위 120곳이 발견됐다"면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 부실로 콘크리트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 바람에 생긴 구멍이며, 여기에 수분이 들어가 일부 부식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민주화 성지 폄훼한 경찰청장 유임
촛불정신 격려한 광주청장은 좌천

"이래도 되는겁니까"

시민단체 "文정부 진정성 의심"
경찰 자체 수사 중립성 의문 속
이철성 청장 직권남용 고발도

광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민들이 "촛불 민심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광주와 촛불 정신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촛불집회 과정에서 '페이스북 게시물 경찰청장 삭제 지시 의혹'〈광주일보 2016년 11월 21일 6면, 8월 8일 1·6면〉과 관련해 '민주화의 성지'와 '촛불 집회'를 폄훼한 경찰 총수는 유임시킨 반면, 광주시민의 촛불 정신을 격려했던 당시 강인철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좌천에 이어 퇴임 압박, 감찰 등 10개월간 핍박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철성 경찰청장의 유임 및 광주 폄훼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조만간 청와대와 경찰청 앞에서 시위에 나서기로 하는 등 지역민심도 들끓고 있다.

광주의 촛불집회를 이끈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전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8일 "이철성 청장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를 보여줬다.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는데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인 이 청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광주지역 95개 시민단체 실무진과 만나 입장을 정리하고 성명서 발표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청와대와 경찰청 항의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순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회장도 "광주시민들과 함께 상경 투쟁 등 이철성 청장의 사퇴 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서원민씨도 "광주와 촛불정신을 폄훼한 인물을 경찰총수에 앉혀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 민심에 따라 적폐청산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 자체 페이스북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과 '국정농단 헌정파괴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플래카드 사진을 함께 실었다가, 다음 날인 11월 19일 해당 게시물을 갑자기 삭제했다.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은 이 게시물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질책을 들은 뒤 삭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7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철성 청장이 갑자기 전화를 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근무하니까 좋쏘', '당신 말이야, 무슨 얼어붙을 민주화의 성지야', '촛불 하니까 다 정리된 줄 알아' 등 막말을 쏟아내 당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10여일 뒤 강 전 청장은 잇따라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5주 동안 감찰까지 받았다.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당시 강 전 청장에게 삭제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수사를 특수수사과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최고위층간의 논란을 경찰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까"라면서 "진실게임의 한쪽 당사자가 경찰 총수인데 그 수족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중립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또 "하급자인 강인철 치안감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철성 청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 무척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이 청장이 광주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민주화의 성지' 문구를 문제 삼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청장을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회사 워크숍서 여직원 성폭행 시도…말리던 동료에게도 행패

쌍나팔

○…회사 워크숍에 참여하다 여직원 숙소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

○…8일 경기여주경찰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께 여주시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직원 B(여·24)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 옆에서 자고 있던 직원 C(여·31)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

○…전날 회사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A씨는 전날 저녁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방에 들어가자 모텔 카운터에서 열쇠를 받아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연합뉴스